

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|

황성기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 
sghwang@hanyang.ac.kr

1. 불법 콘텐츠와 청소년 유해콘텐츠의 구분
2. 성인/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
3.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의 존중
4.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
5. 청소년 보호와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
6. 자율규제의 확대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

---

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내지 고려요소들

-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'정당성' 및 '실효성' 평가를 위한  
판단 기준

---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불법콘텐츠와 청소년 유해콘텐츠의 구분 |

### 불법콘텐츠 (illegal content)

- '금지의 대상'
-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 대한 유통도 금지
-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의 접근 및 이용도 금지

### 청소년유해콘텐츠 (harmful content)

- '관리의 대상'
- 성인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 않음.
- 예) 청소년보호법상의 '청소년유해매체물'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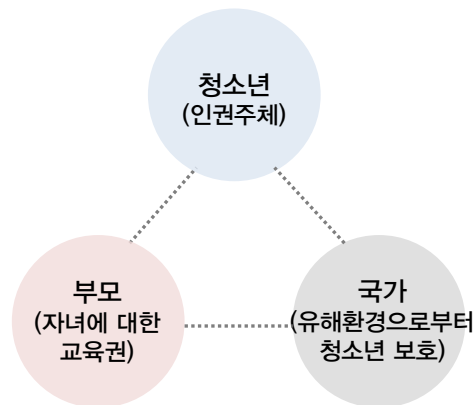
-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함.  
이 두 가지 규제가 분리되지 않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
  -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이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를 '목적' 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됨.  
만약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이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활용되면,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의 본질이 '변질' 되고 '왜곡' 될 가능성이 높음  
예) 2005년도의 'VOD사건'
  -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수단이 불법콘텐츠 규제의 '효과' 를 유발해서는 안됨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성인/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|

-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/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함
-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은 통제할 것인가?
  - 구체적인 통제수단 내지 통제방법에 관한 문제가 등장
  - 오프라인에서는 연령확인, 포장, 구분 및 격리, 표시 등이 적용
- 이러한 수단 내지 방법들에 대한 평가척도
  - 청소년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,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해선 안됨.
  - “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.”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의 존중 |

- 청소년 보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구도는 ‘청소년, 부모, 국가 간의 3면 관계’ 로 형성



- ‘청소년, 부모, 국가 간의 3면 관계’ 라는 개념은 이들 세 가지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.
  - 이러한 3면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국가의 후견주의는 ‘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’, ‘부모의 교육권으로 상징되는 가족의 자율성’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.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의 존중 |

– 청소년 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

### ■ 청소년의 자율성 요건

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복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

### ■ 가족의 자율성 요건

청소년의 제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자신의 교육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

##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의 존중 |

### - 청소년 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

청소년의 자율성 존부 가족의 자율성 존부	청소년의 자율성 존재	청소년의 자율성 부재
가족의 자율성 존재	㉠	㉡
가족의 자율성 부재	㉢	㉣

- A. ①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복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② 청소년의 제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자신의 교육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
- B. ①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복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② 청소년의 제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자신의 교육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
- C. ①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복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② 청소년의 제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자신의 교육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
- D. ①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복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② 청소년의 제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자신의 교육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

■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는 두 가지 요건이 '동시'에 충족되는 ㉠의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음

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|

- 우리나라의 등급분류시스템은 ‘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’
  - 예컨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,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전등급분류
  - 이러한 등급분류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‘청소년 보호’

-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함.

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청소년 보호와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 |

-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청소년 및 성인의 일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



**표현의 자유**

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는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권(알권리)을 제한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나타남



**영업의 자유**

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청소년 보호와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 |

-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가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 부분을 주목할 필요.
  - 청소년유해콘텐츠의 판단기준 영역 : 청소년유해콘텐츠 판단기준이 보수적일수록, 성인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범위는 그대로이면서,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수 없는 콘텐츠의 양과 범위는 늘어나게 됨.
    - 예) 만화가 이현세의 작품 「천국의 신화 소년용」의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
  -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접근통제방법 영역 : 온라인에서의 연령 및 본인확인에 발생하는 인증비용의 문제.
    - 온라인에서의 연령 및 본인확인수단이 당해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인증비용을 요구하게 되면 의사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.
  
-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.

## |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| 자율규제의 확대 |

- 인터넷의 등장 이후 매체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방식인 정부규제(government regulation)에 대해 그 정당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져 왔음
  - 정부규제의 대안으로 자율규제가 제시되어 왔음
  -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향후 더욱 더 강조될 것임
- 예)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에 의한 자율심의,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(MOIBA)에 의한 자율심의,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에 의한 자율심의 등

- 청소년보호와 자율규제는 양립 가능함!!
  - 예) Jens Waltermann & Marcel Machill(ed.), *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: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*,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, Gütersloh, 2000

THANK YOU

---

By **Hwang, Sung Gi**

Contact : [sghwang@hanyang.ac.kr](mailto:sghwang@hanyang.ac.kr)